

##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외교장관 발언문

케리 장관님, 기시다 장관님, 비숍 장관님,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님  
동료 장관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내 심각한,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COI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엔 총회에서도 책임규명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COI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사무소 개소를 위해 OHCHR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한 COI 결론을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최근 이례적으로 발표한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체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해 자주권이 필수적이라면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강력한 자주적 능력 강화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진정한 기초인 인권을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유엔 인권 메카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에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며, 국제사회와 광범위한 인권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권 대화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을 환영하며, 남북한 간에도 인권대화과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특히 대통령의 지난 3월 연설 이후 북한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를 위해, 최근 WFP와 WHO을 통한 총 1,300만불 지원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북한 인권을 다루어 나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